

## 구술사에 대하여 내가 생각한 두세 가지 것들

###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의 경우

안 승 택 (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

#### 1. 들어가며

발표자가 구술사의 문제의식을 처음 접한 것은 인류학과 석사과정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 읽었던 『기억에서 역사로』<sup>1)</sup>를 통해서였다. 종래 인류학의 하위분야 중 ‘사(史)’ 자가 들어가는 것은 생애사와 역사인류학 두 분야밖에 없었던 바, 이 리뷰 논문은 당시 역사적인 문화 연구에 관심을 지녔던 많은 (예비)인류학자들에게 구술사의 위상과 성격, 의의를 각인시킴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다. 특히 역사민속학과 (향촌)사회사의 정향을 한편으로 품고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역사인류학적 연구를 진행한다는 기획을 갖고 있던 발표자로서는, 이 글에서 받은 영감과 자극, 고무와 선동—사실 이 글은 대단히 선동적이었다—은 결코 적게 잡을 수 없는 위력한 면이 있었다. 그로부터 반세대가 경과하여 한국구술사학회가 창립을 보고 그 1회 연구발표회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하여 약간의 감회가 없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으니,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분투하신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그간 품문만을 수습하고 있던 외부인으로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싶다.

15년 전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인류학에서 역사에 대한 관심은 학사적(學史的)으로는 정당한 입지를 확보하였으되 개별 연구(자)의 입지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는가 한다. 20세기 초중반의 기능주의 인류학이 보였던 소위 ‘민족지적 현재의 오류’에 대한 비판 이후, 역사에 대한 관심과 설명은 인류학에서 이론적으로 불가결한 요구조건이 되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포착하고 드러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괄호가 쳐진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대개는 본론과 일정하게 분리된 채 서론에서 ‘역사적 배경’으로 이를 다룸으로써, 그러한 관심 내지 요구를 처리하는 것이 대세인 상황이었다. 물론 이런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흐름들이 한편으로 존재하여 역사학자들과 격렬한 논쟁 혹은 지적 자극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인류학자가 민족지적 현재(ethnographic present, 조사지에 뛰어들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시점) 이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현지조사를 통해 포착된 상황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방법론적 난제로 남아있었다.<sup>2)</sup>

인류학 외부로 시선을 돌려보면,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이미 다양한 주제와 분과로 벌어져 무성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감과 자극 역시 만만치 않았다. 혁명사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사회사와 역사사회학자들의 사회학적인 역사, 프랑스 아날학파의 사회사·전체(구조)사·심성사 혹은 인류학적 역사학, 영국의 네오마르

1) 윤택림, 1994,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2) 아마도 여기에는 두 가지가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이 난제는 실은 인류학만이 아닌 모든 역사적 인문·사회과학이 짊어진 문제라는 점, 둘째, 인류학에서 방법론적 매뉴얼의 부재 내지 약세는 역사적 접근만이 아닌 분과 전체에 내재한 문제라는 점이다.

크시스트 역사학, 이탈리아의 미시사, 독일의 일상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계승자이면서 파괴자였던 신문화사 등등. 이러한 다양한 조류들은 국내의 역사적 연구의 흐름들 내에서도 일정하게 평행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며 전개되어, 비록 다수/주류를 점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지적인 짝들을 형성해나갔다.

오늘의 자리와 관련하여 본다면 우리는 이 목록에 구술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추가’에는 약간의 지적 혹은 정치적인 부담이 수반된다는 ‘느낌’이 있다. 이 ‘느낌’이란, 뭐라고 정확히 표현할 수 없어 다소 비유적으로 적는다면, 상기한 목록의 각종 ‘○○사’들과 구술사 사이에 이중선은 아니더라도 보다 굵은 실선이 그어져 있을 것 같다는 긴장, 상기한 각종의 ‘○○사’들 사이에서는 월장(越牆)이 어느 정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들과 구술사 사이의 월장은 보다 난이도가 높은 묘기가 될 것이라는 부담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 긴장과 부담은 비-역사학 전공자인 위에 딱히 구술사를 전공했다고 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구술사를 포함하는 상기 목록과 자신의 자리 사이에 더욱 굵은 실선이나 심지어 이중선이 그어져있을지 모르는, 그러나 구술사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 발표자에게만 고유한 것일까.

한국구술사학회 연구위원회로부터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이하 『농법』)<sup>3)</sup>을 소개하는 발표 기회가 주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영예로 생각하며 수락한 후에야 이것이 이 학회의 제1회 연구발표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되었지만, 이 자리가 구술사학회의 입장에서도 일종의 꽃놀이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어떤 판에서건 꽃놀이패에게는 꽃놀이패의 갈 길이 있는 법이다.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마도 발표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자리에 참여하신 각인이 처하였던 난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구술사로부터 모종의 영감과 자극, 고무와 선동을 받았던 기억과, 그것을 새롭게 프로그램화하려는 에너지의 소산이 아닌가 한다. 동시에, 역시 발표자가 그러한 것처럼, 이 자리에는 각자가 지닌 연구분야의 목록들에 존재하는 칸을 넘어 새로운 융복합 연구분야를 제도화하는 데에 따르는 긴장과 부담도 있을 듯하다. 이 긴장과 부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선 꽃놀이패의 역할이 아닐까. 일천한 공부의 내용을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소개하라는 부담스러운 과제를 짊어진 발표자가 이와 같은 산문 형식의 발표문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 이와 같은 꽃놀이패 나름의 긴장과 부담이 있었다는 점을 우선 서두에서 밝혀두고자 한다.

3) 이 발표에서 소개하는 『농법』에는 몇 가지 판본이 있다. 첫째는 발표자의 박사학위논문(『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경기남부 논밭병행영농의 환경·기술·역사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으로, 이 발표문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농법』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이를 가리킨다. 둘째는 『농법』에서 순수하게 농업기술을 다룬 앞쪽 절반가량과 뒤쪽 한 장을 떼어내어 출간한 단행본(『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환경과 기술의 역사인류학』, 신구문화사, 2009)으로, 이하 『농법-1』로 표기한다. 셋째는 『농법』의 학위논문 제출을 전후하여 『농법』에 실린(실릴) 내용 중 일부를 학술지에 게재한 개별 논문들(줄고, “일본식근대농법과 식민지조선의 농속(農俗) 사이: 정조식(正條植) 장려와 막모관행의 충돌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1, 한국역사연구회, 2006; “18·19세기 대전법 논의와 간혼작(間混作) 문제: 농서(農書)와 농속(農俗)에 나타난 기술과 이념들의 문화론,” 『역사문화논총』 3, 역사문화연구소, 2007; “식민지 조선의 소주밀식(小株密植) 정책과 농민의 소식(疎植) 관행: 역사생태의 지평에서 본 농업기술의 비교문화론,” 『농업사연구』 7, 한국농업사학회, 2008; “해방 전후 한국농촌의 공동노동과 호락질: 공동노동에서 이탈하는 단독노동 배후의 공동체 이데올로기와 경제논리,” 『비교문화연구』 15-2,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09)이다. 대개 시기가 뒤로 올수록 아무래도 보완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줄고(2009)는 『농법-1』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용적으로는 『농법-1』과 줄고(2009)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낫다. 그러나 이는 다루는 범위가 『농법』 전체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발표는 기본적으로 『농법』에 기초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 2. 『농법』 외곽의 문제의식

『농법』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농민들이 그들을 둘러싼 반(半)-건조지대의 자연환경 속에서 역사적으로 전개시켜온 생산과 생활의 현장을 복원하려는 기획이다. 한반도의 농민들은 지난 수백 년간 이 땅에서 대단히 독특한 사회문화체계를 만들고 또 지탱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문화특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립케 한 자연적·인문적 배경과 역사 과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것은 아시아 혹은 타 대륙의 농민사회들과 얼마나 다르고 또 같은지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는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가 지난 수백 년간,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자본주의가 지난 수십 년간 이들로부터 받은 것들에 비한다면 몹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한국사회는 ‘농자유전(農者有田)’의 이념을 헌법 제86조에 삽입하여 ‘소농사회’의 질서를 법제화하고, 이듬해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농지개혁에 돌입하였다. 이 1948년 체제의 성립은 17세기 무렵 이루어진 작개제(作介制)에서 병작제(竝作制)로의 전환—발표자는 이를 조선에서 농민사회(peasant society)의 성립으로 이해하고 있다—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때 소농사회는 농민사회의 한 특수한 법적·이데올로기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1948년 체제가 국제무역질서에서 농업의 일반적인 예외적 지위를 부정한 1994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의해 와해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로써 전근대에서 근대와 현대로 이어지는 시대 이행의 연속과 단절의 계기들이 포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법』은 이 1948년 체제의 전야(前夜) 그리고 여명(黎明)을 다룬 것이며, 그 시대적 성격을 민속의 수준에서, 그러나 국가기구의 정책 및 지배엘리트층의 이념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밝히려는 기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식민지라는 조건 아래에서 전개된 논농사 중심의 일본식 근대농법과 논밭농사의 병행을 추구하는 재래농법 사이의 충돌과 각축, 조정과 변용의 궤적들을 추적하며, 조선의 농업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일본의 그것과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밝힌다. 이를 통해 근대농법을 앞세운 일본의 식민지배구도 자체에 균열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선 재래의 농민사회가 여하한 지배와 균열의 계기들을 경과하면서 현대적인 형태로 이행하게 되었는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1948년 체제의 전야와 여명의 성격을 ‘민속’의 수준에서 밝히고자 함은, 식자층이 생산한 문헌·문서나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담론이 아니라, 민(民)—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이를 부양·지탱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쓰기’의 권리로부터는 배제되었던—의 삶의 실상과 이들의 고유한 해석으로부터 새로운 역사상을 구축하려는 문제의식—발표자는 역사인류학의 지평에서 접근하였지만 구술사에서도 공통될—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농민은 식량경작자 일반의 특수형태로서 국가에 의해 편성된 사회적 구성물이기에, 권력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민속의 연구에서도 국가기구의 정책 및 지배 엘리트층의 이념과의 상관성 등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이 불가결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기실 농민 혹은 민의 고유한 경험과 해석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지배 엘리트층의 담론과 이념, 상투적 수사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 문화과정은 결코 지배적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내면화에 의한 규율이라는 일방적이고 단순한 구도로 이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지배층으로서의 농민은 한두 겹의 지배담론을 내면화하여 구성되는 공산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겹의 역사적 층위가 중첩적으로 포개지면서 형성된 인문적 구성물이며, 그 중첩의 단층들에는 항상 우연 혹은 개인(들)의 의지에 바탕을 둔 선택의 계기들이 개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여기에 환경조건의 특성과 차이라는 층위를 더함으로써, 권력 관계의 역사인류학이 담론 층들의 현장만을 쫓아다니는 허망한 공중전(空中戰)으로부터 현실의 토양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지상전(地上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학계에서 일제시기의 농업근대화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으로 ‘수탈을 위한 증산/근대화’라는 기술외적 측면에 의한 설명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론은 증산효과를 비롯한 일본근대농법-소위 메이지 농법 또는 후쿠오카 농법-의 기술적인 특징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유보는 일본식 농업개량의 기술적 근대성과 생산력 상승효과를 인정하는 견해를 그 안에 포진시킬 수도 있었다. 표면에서의 담론적 지배 이면에서 내연하던 이 민감한 쟁점은 조선농법의 발전방향과 일본근대농법의 발전방향이 기술적으로 공통된 지향-기술구조의 유사성 및 발전방향의 동일성, 동시대적 동질성을 지니며, 환경과 기술의 유사성이야말로 일본의 농업 식민화를 연착륙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였다. 발표자는 이 구도 하에서의 혼란이 한편으로 전자 내에서의 기술에 대한 논의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또한 부분적으로 역사연구의 자료와 관련한 문제로도 생각되었다. 기존의 논의는 수리조합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토지개량과 관련한 사항에 편중되어, 토지개량과 함께 농업개량의 양대 축을 이루는 경종법 개량-기술적인 차원과 보다 깊은 관련을 지닌-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통 문헌사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리조합 관련문서를 중심으로 문헌사료가 많이 남아 있는 토지개량사업으로 연구가 편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였다.

기술에 대한 논의의 부재는 역사적 문화연구에 크게 세 가지 질곡을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는, 소규모 영농의 농업론과 대규모 영농의 농업론의 대립이라는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가 도출한 중요한 논의구도가 단지 농민층 분해나 농지분배에 대한 입장이라는 견지에서만 논의됨으로써, 계급에 대한 관심의 쇠퇴와 함께 일제시기 연구에서는 물론 조선후기사 내부에서도 급속히 힘을 잃고 더 이상의 생산적인 논의를 끌어가지 못하게 된 점, 둘째, 기술적 근대와 전근대 사이의 물질적 연속성에 대한 인식의 고리가 결락되고 담론의 세계로 과도하게 경도됨으로써, 기술적 근대의 ‘근대적’인 면에 대한 과도한 주목과 강조가 이루지고 전근대와 근대를 잇는 역사상(歷史像)의 구축에 한계를 보인 점, 셋째, 조선의 농민사회가 지녔던 기술적 특징들과 결부되어 나타난 사회문화적 특징들의 연쇄적 체계-『농법』에서는 이를 사회기술체계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지만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가 지닌 특징들이 체계적으로 이해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문화연구가 구축한 역사상이 기술적 개념이나 해외 사례-사회의 비담론적 기초에서 많은 통약성을 찾지 않을 수 없는-를 동원한 논의에 대하여 거의 수수방관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폭발적으로 강화된 지주제의 해체를 향한 움직임, 그리고 이 움직임의 결과 나타난 체제가 다시 1990년대 들어 급속히 해체되는 현상은, 글로벌한 수준에서 나타난 사회역사운동의 경향이기도 하였으며, 일국적인 수준의 설명만으로 온전히 해명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다발적으로 소농적인 농업기술발전의 궤적이 나타난 사실이라든가, 그 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처에서 농민사회가 출현하였던 사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닌 경향인 것이다. 그런데 이 경향이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것은, 단지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계를 구심적으로 통일하기보다는 원심적으로 분리시키는 힘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는 점, 세계 도처의 농민사회를 획일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저마다의 환경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화·이질화시키는 힘을 엔진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바로 공장제

적인 생산문화를 지향하는 산업자본주의가 농업과 농민을 다루는 데에 애를 먹었던 배경이며, 그들을 비효율적이고 낙후한 존재로 낙인찍은 근본적인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 도처의 농업과 농민들이 처한 자연환경의 특수성은 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닌 원심력의 근원이며, 세계를 획일화시키는 산업자본주의의 본성에 맞서 다양성을 본성으로 하면서도 글로벌한 힘을 갖는 새로운 종류의 세계체제를 상상토록 하는 중요한 보루가 될 수 있다. 농사는 무엇보다도 개별로서의 자연환경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점으로부터 『농법』의 서술을 시작한 문제의식이 여기에 있다.

### 3. 『농법』 내부의 논의지점

『농법』은 정조식(正條植) 이앙의 도입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 양상과 논리, 그리고 그러한 양상과 논리 배후에서 환경적·기술적 배경을 이루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힘들의 차원을 탐색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sup>4)</sup> 정조식과 막모의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농업개량, 특히 경종법 개량에 있어서 정조식의 도입은 논의 형태 자체를 일본식 근대농법의 구현에 적합한 것으로 만드는데 관건이 되고, 그만큼 가시적—그리고 ‘과시적’—인 측면에서 감각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농민들에게 있어서는 비료나 신품종 도입, 농지개량과 수리조합사업 등에 못지않게 일제시기 농업개량의 한 중요한 계기로서 인식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조식에 의한 모내기는 그만큼 번거롭고 일손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변화에 격렬하게 반발하였든 순조롭게 받아들였든, 이 시기 농업개량이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실행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정조식이 번거롭고 일손이 많이 드는 이앙법이라는 사정은, 그것이 논발병행영농의 여러 내밀한 차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삼그루판의 상황에 이루어지는 논농사 작업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중요해진다. 삼그루판은 경기남부의 농민들로부터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밭 이모작의 앞작물 수확작업과 뒷작물의 파종작업, 그리고 논농사의 약간 늦어진 모내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6월 중하순의 바쁜 농사철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sup>5)</sup> 이 삼그루판의 상황은 반건조지대의 기후특성으로 인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어느 한쪽으로도 편중될 수 없어 양자를 동시에 추구해야 했던 논발병행영농의 생리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시공간적 현상이다. 또한 그것은 일본근대농법의 전일적인 관철을 어렵게 했던 조선의 농업환경이 그 무지막지한 본성을 날것으로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강제적인 정조식 보급에도 불구하고 막모 이앙이 이루어지던 것은 수리가 불안정한 천수답과 논배미 크기가 작고 모양이 불규칙한 논, 그리고 가뭄 끝에 뒤늦게 모내기에 나서는 만이앙(晩移秧)의 조건 아래에서였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은 조선의 논농사가 일제시기는 물론 해방 이후로까지도 지속적으로 안고 있던 지배적인 농업환경요인이었다. 조선의 농민들

4) 정조식이란 모내기 도구를 써서 가로세로 양방향으로 줄을 맞추어 이앙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경종법 개량과 토지 개량을 양대 축으로 삼아 이루어진 일제시기의 농업개량 중에서는 전자에 포함된다. 일제시기에 정조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흔히 ‘막모’라고 불리는, 가로세로 줄맞추기를 엄격히 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간격을 조정하면서 모를 쫓는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5) 조선후기의 농서들에서는 이를 ‘삼농극망지시(三農劇忙之時)’ 등으로 표현하니, 세 가지 농사로 극히 분주한 철이라는 의미이다. 경기남부의 농민들은 이에 대하여 “삼그루판에는 부지깽이도 땀다”거나 “그림자까지 일한다” 혹은 “굼벵이도 제 일 할 때는 세 길을 땀다는 거지”라는 등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시기의 분주함을 묘사하니, 이때는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품값도 등귀하고, 이에 따라 “삼그루판에는 하루 벌어 사흘 먹는다” 혹은 심지어 “열흘을 먹는다”고도 일컬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

은 이러한 반-건조지대의 자연환경에 상응하는 논밭병행의 영농방식과 만이앙에 따른 농업 기술 및 작부체계를 발전시켜왔던 바, 이는 정조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제초기에 의한 논매기가 크게 보급되지 않고 농민들이 일제시기는 물론 해방 이후로도 논호미에 의한 제초 작업을 고수하였던 배경이 되었다. 논호미에 의한 제초는 두레 등 공동노동에 의한 다양한 노동문화와 밀접히 결부된 것이었다. 제초기에 의하는 일본식 논매기와 논호미에 의하는 조선식 논매기는 모두 노동집약적인 논농사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이지만, 전자는 토양의 반전능력이 약하여 노동강도가 약한 대신 제초회수(즉 논에서의 작업시간)를 늘려야하는 반면, 후자는 토양의 반전능력이 커서 노동강도가 세지만 제초회수를 줄일 수 있는(논농사 외에 밭농사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정조식 보급의 또 다른 농사개량의 원칙이었던 소주밀식(모 한 포기에 심는 모의 수를 줄이는 대신 모 포기 사이의 간격을 좁힘으로써 증산을 도모하는 농법)을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술을 곁들이고 노래를 불러가며 공동으로 흥겹게 논매기를 하는, 그리하여 논에서 많은 시간 공을 들여 벼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일거에 몰아치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조선의 노동문화는, 이러한 노동 집약화의 조선적인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농법』이 이어서 다루는 것은, 모내기판에서 드러나는 근대농법과 재래농법의 각축전 및 그 배경에 존재하는 환경과 기술 요인의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구성상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발판으로 삼아, 그 각축전의 한 축이 되었던 재래농법의 성격을 재구성하려는 기획이다. 분석은 그 역사적 성격과 지리적 성격, 그리고 경제생리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선 논밭병행영농의 시간적·공간적 외연이 드러나고, 그것과 쌍을 이루던 동시대의 대립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의 인간개체군(human population)으로서의 논밭병행영농이 어떠한 생리적 기제를 통해 존재를 생산·재생산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기존의 조선/한국농업사 연구에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해왔던 남부의 논농사와 북부의 밭농사라는 틀, 혹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분리하여 별도의 논리에 의해 다루는 관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거의 전영역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쌀문명권 각처에 널리 포진하는 논밭병행영농이라는 영농형태를 이해하는 길을 열고자 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 주목하였던 것은, 농업과 상업, 농업 중에서도 논농사와 밭농사, 밭농사 중에서도 여러 작물의 이어짓기(윤작), 섞어짓기(혼작), 사이짓기(간혼작)의 병행을 본성으로 삼는 ‘포트폴리오 영농을 하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농민’이라는 상을 포착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농 경영의 본성은 농민사회가 지닌 고유한 성격으로서 자주 지적되어 왔던 것이지만, 윤·간·혼작 농법의 유례없는 정교한 발전, 곡물 농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상업경제에 긴밀히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상업에 뛰어들기도 하는 등 마치 유격전을 벌이듯이 과격한 이동성을 보이는 점 등은 그 조선적인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본과 달리 상업을 겸하는 농민이 많았던 조선의 농민적 상업문화, 이들이 보이는, 작은 이익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생산품 운반에 나서는 비상한 기동성, 그리고 ‘사람이 많아야 잘 되는 장’이라는 농민들의 세계관과 같은 것들이 논밭병행영농으로서의 생계활동과 그 본성의 깊숙한 부분에서 서로 결부된 현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조선/한국의 농민사회와 일본의 그것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로 이끌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또한 주요하게 다룬 것은, 소농들의 재래 윤·간·혼작 농법을 조선의 농업에서 극복되어야 할 주요한 장애물로 여기면서 중국의 화북식 밭농사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던 북

학 계열 농서편찬자들의 농업론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이들과 일제시기 일본인 농학자들 사이의 농업이념의 유사성을 그 차이의 양상과 함께 드러내려는 기획이다. 이는 한편으로 농업사 연구의 심화, 내적 체계의 정교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명료한 내러티브를 포기하는 대신 역사현상의 미묘함과 다양함에 주목함으로써, 이전 시기에 다분히 도식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던 지주적/농민적(소농적) 농학이나 광농/소농 경영과 같은 구분들이 유의미성을 상실한 결과, 뜻하지 않게 조선후기의 농업사상(農業史像)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농업기술체계 및 농업론의 각축’이라는 지평이 사라지고 ‘새것에 의한 옛것의 구축(驅逐)’이라는 틀이 지배적인 내러티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조선 재래의 간혼작 농법이 조선후기 농서편찬자들이나 침략초기 일본인 농학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맥류의 상품가치가 여전한 한에 있어서는 근대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었다. 각자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원형은 달랐지만, 조선후기의 북학사상 계열 농서편찬자들이나 일제초기의 농학자들이나 모두 작부체계의 단순화, 재배농가의 전업화 및 대규모화, 재배농지의 공간적 구획 및 질서화 등을 추구하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율화된 새로운 농업경영,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근대적’인 영농시스템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한쪽은 중국식 농법으로의 개편을 원했고, 다른 한쪽은 일본식 농업으로의 개편을 원했지만, 모두가 현실과 맞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 후 현실 농업의 전개방향 역시 그 어느 쪽의 방향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다.

『농법』의 마지막 장은, 앞 두 장의 논의를 디딤돌로 삼아, 보다 포괄적인 식민지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맥락 그리고 조선/한국 농민사회의 사회경제사적 변화의 맥락에 접속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934년의 산미증식계획 중단(그리고 이에 따른 토지개량사업의 중단)으로 현상한 조선총독부 농업증산정책의 궤도수정은, 물론 세계대공황에 따른 일본 내 미가 폭락과 미곡공급과잉이 기본적인 원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토지개량사업뿐 아니라 일본식 근대농법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농업증산정책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일본식 근대농법의 전일적인 관철에 의한 농업개량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리조건의 확보가 불가결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이 확립된 곳에서는 토지개량사업에 따른 비용증가를 상쇄할 만한 수지균형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확립되지 못한 곳에서는 그러한 근대농법의 온전한 적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이앙기 가뭄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자연환경요인이었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농업증산정책은 한편으로 경종법의 개량(농사개량)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만, 곧이어 제국의 관도 전역이 전시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비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 또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총독부는 조선재래의 농법, 특히 건조기후에 적합한 기술이라든가 고유의 밭농사 기술을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역시 한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실효성 있는 농업증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조선으로부터 패퇴하고 말았다. 이에 의해 특별한 개량과 농업증산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실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본래부터 이 땅에 있었던 농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업개량을 통한 농업증산정책의 굴절은, 조선 농민의 노동관행, 특히 공동노동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농촌촌락정책에서의 변화와 짝을 이룬다. 그 큰 줄거리는 식민지화를 전후한 시기 이래 존재했던, 조선의 (공동)노동문화 및 농민사회 전반에 대한 문화적 몰이해에 기반한 멸시적 평가의 흐름, 이것이 한편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 재래의 노동조직과 관행을 농업증산에 적극 포섭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던 1920년대 중반 이

후의 흐름, 그리고 다시 이를 부정하고 농촌촌락에 황민적 공동체를 강제하려던 1930년대 후반 이후의 흐름—인보상조(隣保相助)나 공동(共同), 화중협동(和衷協同), 혹은 보수(報酬)의 다과(多寡)를 불문하고 모든 작업에서 끝까지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등의 요청이 전통의 덕목 등으로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체제 아래의 국민·신민으로서의 당연하고 절대적인 의무로 제시되며 농촌에 공동체성이 강제로 부과되는 상황—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 조선의 농민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역사학 및 역사적 사회과학의 식민지배의 문제에 대한 검토는 지배정책과 담론에 대한 분석에만 머물러서 식민지 경험의 실제 양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배규율의 내면화’와 같은 논의의 일면도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들이 주로 지배자 혹은 엘리트층의 입장이 반영된 문헌자료—일반농민이나 노동자가 그것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0%인—의 분석에만 머물렀던 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었으며, 구술의 채록을 포함하는 역사인류학적 현지조사를 통해 무언가 기여할 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반상관계의 유제와 지주소작관계가 완강하게 존속하던 일제말기의 농촌사회에서는, 한편으로 앞 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농촌촌락에 대한 황민적 공동체가 강제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농촌 내부에서 농민들이 ‘농촌공동체’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호락질’로 대표되는 이러한 탈-공동체적인 노동관행은 한편으로 조선 재래 농민사회가 식민지화 이전부터 밟아온 역사적 궤적의 귀착이면서, 동시에 일제말기와 해방직후 조선/한국의 농민사회가 돌입한 새로운 사회사적 단계의 산물이다. ‘황민적 공동체의 강제’와 ‘농촌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과정은 사실상 동일한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그 이탈경향은 식민지 지주제의 내부에서 그 수탈기제의 중요한 한 고리로 싹터 식민지 지주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 4. 『농법』의 역사인류학적 방법에서 구술의 지위

##### 1) 시공간 범위의 확장과 문화적 계열

『농법』의 작성을 위한 현지조사는 박사과정진입과 함께 1999년 3월 시작하여 2005년 5월을 끝으로 일단락을 지었으며, 여기에서 사용한 농업 관련 인터뷰 자료는 이 중 20개 시군 63개 구읍면 134개 동리 160개 마을에서 얻어진 것이다. 『농법』이 지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처럼 인류학적 연구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게다가 상호간의 체계적인 연결 관계가 자명하지 않은 촌락들을 연구지역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조사과정 상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농법』의 현지조사는 대개 농업기술과 경제관행, 촌락의 조직과 의례, 신분질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것이 다른 마을이나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잇달아 캐묻고, 더 이상 설명을 들을 것이 없거나 단시간 내에 듣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같은 마을의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마을의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인터뷰의 자리에서도 역시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하나의 인류학적 연구인 『농법』에서 공간 범위의 확장이 가능하였던 것은 조사의 과정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를 보면, 주로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삼아 현미경적인 분석틀로 미시적인 문화적 맥락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인류학적



현지조사의 전형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한 방식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면 애초에 이 연구-현미경이 아니라 다분히 삼차원 파노라마를 의식하였던-는 구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연구의 초기단계에는 그러한 현미경적인 방식과 파노라마적인 방식을 병행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곧 그 문제의식의 구현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일차적인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법』이 구성한 파노라마는 그간 인류학적 현지조사가 장기로 삼아왔던 세부적인 결에 대한 관찰과 묘사를 희생하고 대신 과거에 존재했던 광역단위의 자연-문화 복합경관을 제시하려는, 또 다른 방식의 현지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연구의 관심이 (민족지적)현재에 실제하지 않는 과거의 농업기술 및 생산관행,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자연환경조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하나하나의 마을에서 그 관계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미미하며 몹시 단편적인 설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같은 마을의 다른 농민을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멀리 떨어진 곳-즉 어느 정도 농업환경이나 기술에서 차이가 나는 곳-에 가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의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점검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의 모호성을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방법이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스테인드글라스나 타일벽화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스테인드글라스나 타일벽화에 바짝 다가가 각 조각들을 아무리 가까이에서 이리저리 들여다보아도, 그것들이 거기에 존재하는 의미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인 타일 혹은 유리조각들의 배치 상태를 조망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각 조각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어떻게든 움켜쥐고 끄집어내 하나의 벽화를 그려내는 것이 역사인류학의 한 과제라면, 연구대상의 공간규모를 확장하여 단편적인 구술들을 벽화의 한 조각으로 삼는 것은 그 아스라한 기억들을 증폭시켜 원하는 그림을 찾아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어떠한 학문적 정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든 간에 그 분석에 의해 도달한 설명력의 '직접적'인 유효성의 범위는 결국 설정된 연구대상의 크기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이러한 원칙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 부분에 대한 이해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부분이 전체의 축소판 혹은 은유로서의 소우주(microcosm)도 아닌 이상, 게다가 부분들의 합-즉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쌓아간 결과-이 결코 전체가 될 수 없다면, 전체는 전체-그것을 통합적인 단일한 실체로 보든, 이질적이고 다중적인 구성물로 보든-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전체를 전체로서 다룬다 함은, 단지 양을 늘려 전체에 가까워진다는 의미-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전체가 될 수 없다-에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바 자연환경-농업기술-생산관행의 연쇄적 결부양상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확보함으로써, 그 관계의 부차적인 표현들을 제거하고 본질적인 연결고리들을 포착하는 시각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연구의 공간규모 확장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크기'의 양적 차원에 도달하여 전체를 해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전체로서 생산·재생산되어지는 생리적 기제를 해명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하나의 농촌촌락과 같이 일상적인 대면접촉이 가능한 사회집단이라든가, 노동이나 상업, 행정이나 의례 등과 관련하여 반복적-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으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사회집단뿐 아니라, 이러한 사회관계의 범주들로 포괄되지 않는, 보다 넓은 지역범위에서 나타나는 농업기술 및 생산·유통관행의 반복적 혹은 차별적 출현양상을 추적하

고 이 공간규모의 차원으로부터 설명을 끌어내는 데에도 주력하게 되었다. 이는 특정 현상의 역사적 지속이 설명을 필요로 하는 대상인 동시에 그 자체로 설명의 한 요인이 되는 것처럼, 특정 현상의 지리적 범위는 역사적 연구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인 동시에 그 자체가 설명에서 하나의 변수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연구대상의 시간지속과 공간범위는 역사적 연구의 배경이 아닌 분석주체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상적 혹은 반복적인 대면접촉이 부재한, 게다가 상호간의 사회적 연결 관계도 자명하지 않은 집단들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삼는 일은, 자칫하면 이들이 모두 하나의 문화-농민문화나 한국문화 혹은 경기남부문화 등-를 공유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논의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다. 이는 이론적으로 위험한 전제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렇게 연결 관계가 자명하지 않은 집단들을 상호 결부시켜 이해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구의 틀과 개념이 필요하였다. 문화적 계열들(cultural serials)이라는 개념은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장기적인 기획 아래 구성된 것-『농법』에서는 아직 성공적으로 정립되지 못했지만-이다. 즉 인류학적 현지조사가 가능한 소규모 사회에 대한 역사적 중층기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화적 맥락들(cultural contexts)의 파악 외에, 인류학적 현지조사로 하여금 그 조사대상인 소규모 사회의 관찰 가능한 범위라는 경계를 뛰어넘는 역사적·지리적 이해에 도달하게 해줄 문화적 계열들의 파악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어즈의 『문화의 해석』에 따르면, ‘맥락’은 ‘해석 가능한 부호들(혹은 상징)의 상호 연결된 체계’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인류학자는 이 맥락을 통해 앞서 일어난 사회적 사건이나 행위, 제도,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즉 중층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발표자는 이를 특히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통해 흔히 연구되어온 하나의 소규모 사회에 대한 내적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계열’은 문화적 맥락의 공유 여부를 넘어 특정한 사회구조적 혹은 사회관계적인 위치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관찰 가능한 지표들(indicators)의 상호 연결된 체계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그 정의가 ‘해석 가능한 부호들’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지표들’로 내용상 축소된 것은, 역시 사회집단들 간의 상호관련성이 자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성의 존재여부를 ‘해석 가능성’으로부터 판단하였을 때 과도한 ‘단일자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서 특정 지표의 출현 혹은 소멸 양상을 통해 문화적인 지속·공유나 분화·변화를 찾아낸다는 기획은 제3세대 아날학파의 계열사(serial history), 특히 보벨(M. Vovelle)의 *Ideologies and Mentalities*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단지, 『농법』에서의 문제의식은 보벨 등이 활용하는 역사자료들의 시계열(즉 역사적 지표들의 반복적인 출현양상)이 본질적으로 연속적이라기보다는 단속적(斷續的)이라는 점, 그러한 지표의 활용이 시간계열에서만 아니라 공간계열에 대한 이해에서도 가능하며 또 발견적으로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삼는다. 『농법』에서는 이를 특히 위에서 적은 바의 의미에서 ‘맥락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회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벨 등 계열사가의 문제의식을 참조할 때, 계열적 지표들의 반복적인 출현양상이 본질적으로 연속적이기보다는 단속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계열사자들의 이론들이 자명하지 않은 연결 관계를 놓고 지표들의 반복적인 출현만으로 연속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식으로 성급하게 일반화-정확히는 시계열적인 문화적 속성으로서 특정 망탈리테의 부여-에 도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작업 역시 이러한 성급한 일반화·전일화의 오류를 경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가령 우리의 연구대상이, 혹은 우리가 연구의 도구로 삼아야 할 바가 문화영역(culture area)과 같은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문화영역은 자연영역과의 경계의 동일성을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 구성이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기에, 결국 특정 자연환경조건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의 문화적인 통일성 혹은 공유를 전제하는 이론들이 된다. 반면 문화적 계열에 대한 문제의식은 특정 지리적 범위 안에서의 문화적인 통일성 혹은 공유상태를 전제하지 않고, 광역 단위의 자연-문화 복합경관 내에서 오직 공통적인 지표가 관찰되었을 때 관찰된 두 지점에서 그 지표의 공통성만을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지표가 공통적으로 출현한 지역들이 다른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서로 이질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즉 그러한 광역적인 자연-문화현상을 역사적으로 포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의 시공간적 경계를 선형적으로 설정한 후 그 속성을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으로 해당 현상의 속성 중 그 존재를 확인해주는 지표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어서 그 시공간적인 외연(시간지속과 공간범위)을 추적함으로써 해당 현상의 외연을 연구 및 서술의 결과물로서 드러내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계열들이 서로 상이한 외연을 갖고 전개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 그 계열적인 연쇄관계가 탐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2) 자료 계열의 다각화를 통한 계열적 지식의 단층 넘기

이러한 ‘광역 단위의 자연-문화 복합경관’ 그리고 ‘관찰 가능한 지표들의 반복적인 출현으로 특징지어지는 문화적 계열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발표자가 보기에 넓게는 인류학에서, 좁게는 역사인류학에서, 관찰이라는 방법의 의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류학적인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이 무엇인지를 특징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것-발표자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이 아마 참여관찰 그리고 친밀감(rapport)의 형성에 기반을 둔 심층면접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인류학자로서 흔히 하거나 듣게 되는 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논평이 이루어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개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일 것이다. 이는 문화인류학적 연구로서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으로까지 생각되므로, 연구주체로부터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의 선택은 물론 심지어 논문장절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결정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잘했다’ ‘못했다(부족하다)’는 평가가 난무하는 데에 비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의 제시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상투화된 제도적 관행이라고 치우고 넘어가기 어려운 것은, 문화인류학 전공자/비전공자를 막론하고 ‘인류학적’이라고 부르는 속성들의 상당부분이 그와 관련된 어떠한 측면들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역사인류학적 접근을 취하는 경우 이 문제는 보다 난해한 문제가 된다. 역사인류학적 연구가 문화 현상의 역사적 성격과 역사 현상의 문화적 성격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때, 필연

6) 굽타와 퍼거슨은 “놀랍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미국의 유력한 인류학과들 대부분이 현지조사방법의 훈련을 정규과목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이중 극히 일부에서만 비정규적으로나마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인류학의 전문가들에게도 현지조사의 비법이 지니는 신비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심지어는 조사의 선정과 같은 아주 분명하고 실질적인 이슈에 대해서조차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적은 바 있다(Gupta and Ferguson, *Anthropological Locations: Boundaries and grounds of a field science*,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2). 물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현지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강화된 근래 들어 심화된 경향이겠으나, 예전부터 현지조사란 기본적으로 ‘물에 던져놓고 알아서 뜨거나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게임’(sink or swim game)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종종 지적이 있어왔다.

적으로 이는 ‘참여’적인 성격의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종류의 단순한 ‘관찰’조차도 불가능한 어떤 것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시 역사인류학적 연구의 주제와 대상, 방법, 논문 구성과 기타 제반양상을 지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니, 역사인류학적 연구주제에서 ‘기억의 정치학’과 관련된 주제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기가 거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역사인류학적 연구는 인류학이 장기로 삼고 또 그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어떤 핵심적인 속성들을 구현하기에 가장 부적합—이라는 표현이 지나치다면 불친절—한 사상(事象)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인류학적 연구에서 그 그림—대개의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친밀감의 형성을 토대로 참여관찰의 방법에 주로 의지하면서 만들어지는—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아니 그 이전에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한 일인 것일까.

당연히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농법』은 ‘삼차원 파노라마적인 자연-문화 복합경관’이라는 것이 역사인류학적 연구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그림이 될 것이라는 기대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와 지리가 인류학의 본령인 ‘사람 이야기’를 통한 ‘그림 그리기’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은, 역사와 지리를 분석의 본령으로서가 아니라 서두 혹은 배경—말 그대로—에 쓸모없이 놓아두었던 기존의 학문적 관행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시간과 공간을 그저 연구의 배경으로 서두에 덩그마니 놓아두는 데에 만족하는 사회(과)학자들을 비난했던 브로델의 문제의식<sup>7)</sup>을 참조한다면, 그리하여 역사와 지리를 그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제시하는 일련의 부차적인 서술들로부터 구출하여 역사문화적 사상(事象)이 성립·운동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끌어들인다면, 역사인류학자가 인류학자로서 지닌 부적합성(혹은 연구대상의 불친절성)은 그가 지닌 무궁무진한 광맥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는 당연히 현하의 학문적 장벽을 넘는 융합적 연구, 혹은 기존의 분과학문의 틀에서 비어있던 영역의 연구로 이끌어갈 것이며 오늘의 이 연구회 자리 역시 그런 줄기 중의 하나일 것으로 믿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료의 성격에 따른 활용방도라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의 특정한 측면들은 연구 혹은 설명의 서두에 배경설명을 위해 쓰이고 다른 어떤 특정한 측면들은 인간의 삶의 핵심적인 동기를 구성하는 것처럼 다루는 관행이 부당한 것처럼, 인간 삶을 기록한 어떤 종류의 자료들은 연구 혹은 설명의 서두에 배경설명을 위해 쓰이고 다른 어떤 특정한 자료들은 인간의 삶의 핵심적인 동기를 구성하는 것처럼 다루는 관행 역시 몹시 부당한 일일 터이다. 연구와 그 결과 도달한 설명이 총체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사하는 자료 역시 총체적인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교사들의 기록 외에는 문서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현지조사를 강조했던 인류학적 방법론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기존의 일제시기 연구나 농업사·농촌사 연구가 정책사와 운동사, 혹은 통계나 담론의 역사로 경도되어 갔던 배경에도 역시 자료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7) 브로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차단시키기도 하고 동결시키기도 하며 다시 작동시킬 수도 있는 이 만만한 시간에 의해 성가심을 당하는 일이 없다. ... 현실의 시간, 역사적 시간은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집에 있는 바람과 같이 양피(羊皮) 속에 단단히 갇혀 있다(브로델, 『역사학논고』, 서울: 민음사, 1990, pp.79-81).” “또한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나는 역사에 딸린 관례적인 지리의 도입에 만족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관례적인 지리의 도입은 광산들, 경작방식들, 꽃들과 더불어, 다급하게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동 중에 있는 양떼들이 정지해버린 것처럼, 해마다 봄이 되면 꽃들이 다시 피지 않는 것처럼, 배들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실제 바다 위를 향해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서, 수많은 책들의 서두에 쓸모없이 놓여있다(같은 책, pp.17-18).”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사와 정치사 일변도에서 사회사·문화사·생활사로의 관심의 이동·확장’이라는 슬로건이 이미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적생산에서는 다분히 미흡함을 면치 못했던 것이 우리 학계의 현실이었다. 그러한 현실의 왜소함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역사적 연구에서 구사되는 자료들의 제한성 그리고 각종의 자료들을 상호 결합시키는 기획의 소극성에서 기인한다. 동시에, 학계의 편성 자체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는 현실 역시 이러한 현실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한쪽에는 역사학의 본질적 관심사이기도 한 시대구분의 필요성이 역사학 내부의 분업체제와 제도적 관련을 맺음에 따라 현실적으로 연속적이고 총체적일 수밖에 없는 역사과정을 분절·고립시켜 이해하는 파편적 역사인식이 재생산되는 현실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근대 경험’을 ‘전근대적인 것’들로부터 단절시켜 과도하게 새로운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과학 일각의 편향이 있다. 이들은 마치 서로를 미워하는 쌍생아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계의 편향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역사인류학적 연구는 그 자료를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구술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지탱해온 당사자들의 구술을 채록함으로써 농업과 농민에 대한 연구를 제도사·담론사·운동사로 경도시키는 힘들의 대척지점에 무게를 보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그 연구에서 구술 자료가 차지하는 위상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이 되는 일에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술과 문서 자료 외의 다양한 자료들을 연구의 장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활용하는 ‘사료’에서부터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술의 역사적 가치에 먼저 주목해온 역사인류학적 연구는, 그 영역 혹은 활동의 중심을 구술사로 제한하지 않고 문헌을 주로 다루어온 기존의 역사학, 유물과 유적을 주로 다루어온 기존의 고고학(및 일부의 민속학) 등과 연구관심 및 방법론의 측면에서 향후 소통과 통합을 이룰 때, 총체적 접근을 방법론적 모델로 삼는 인류학의 특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 다른 분야에서 구술 자료에 접근해 들어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과업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역사적인 연구는 무엇보다도 사료를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연구의 혁신을 사료의 혁신으로부터 추구하는 것은 역사연구방법론에 비추어보아도 정당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3) 구술 자료의 텍스트 구성에 대하여

이러한 견지에서 진행되는 문헌자료들에 대한 역사인류학적 검토는, 다루는 시기와 지역을 불문하고, 역사인류학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학, 그리고 역사학을 포함하여 모든 인문사회과학적 연구에서 불가결한 과정이므로,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방법론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즉 구성된 텍스트를 사용하여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특정 사회역사적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인류학의 문헌자료 검토에 어떠한 특수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단지 역사인류학의 상위 분야로 놓인 문화인류학의 관행상, 현지조사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연구분석에 활용하는 데에 제약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닐까. 이때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다양한 자료—『농법』의 경우 주로 인터뷰 자료였지만 기타 유물·건조물·유적이거나 사진, 도판, 각종 기록물 등—를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사회역사적 현상의 분석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 ‘텍스트의 구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네 가지 정도 짚어둘 지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특정 사회역사적 현상, 특히 과거의 어떤 시기에 일어난 일의 분석에 사용하는 것은, 역사인류학자에게 여타의 인문사회과학자, 특히 문헌사학자에게 잘 허여되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 즉 역사인류학자는 자신이 사료로 사용할 텍스트를 스스로 구성하는 작업을 무엇보다도 연구지역에서 만난 주민들과 함께 하게 된다. 이는 역사인류학자를 포함하여 인류학자에게는 낯설지 않은 일이지만, 역사학자에게는 상당히 낯선(혹은 낯설었던) 종류의 일이다. 역사학자가 새로 발굴한 사료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자나 시기,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자료들의 저자·저술시기·간행지 등을 찾아냄으로써 검토대상 사료목록을 확정해가는 작업이 인류학자나 기타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에게 낯선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점, 역사인류학자는 인류학자로서 인류학자에게 허용되고 훈련되어왔던 규칙들에 의거하여 사료 텍스트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학자, 특히 문헌사학자와 구별되어 역사인류학자에게 부여된 특수한 지위와 역할, 방법은 여기까지이며, 이러한 구분조차 점차로 사라지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한다. 그 후의 작업은, 역사학자이든 인류학자이든, 과거의 사회역사적 현상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이론적 혹은 기술적(技術的)인 면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종류의 원리나 규칙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농법』은 전제하였다. 일단 구성된 사료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기원이 구술(口述)이든 기술(記述)이든 동일한 원리와 규칙에 의해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흔히 있는 오해 중 하나는, 구술 텍스트가 문서 텍스트에 비해 개인이라는 경험의 한계에 의해 왜곡이나 편견으로 오염되었을 위험이 크지만, 또 개인의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의 경험과 느낌—즉 사회역사적 현상의 극히 주관적인 측면—을 전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문서 텍스트는 보다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부분적으로 타당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릇된 것이어서, 전적으로 그러하다고 간주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다. 『농법』을 준비하면서 발표자는, 문서 텍스트가 오히려 주관적인 편견과 왜곡 그리고 당대 현장의 상황과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구술 텍스트가 그러한 느낌이 배제된 채 과거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풀어내는 경우를 도처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법』에서 가장 유의한 점 중 하나가, 조선시기의 농서에 적힌 내용들과 농민들의 재래농법에 대한 설명을 병치시킴으로써, 농서 행간의 의미라든가 그 배후에서 드러내거나 지우려 하는 의미들을 이해하려는 점이었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가령 현지조사를 통해 두둑의 높이나 폭, 그것을 만들거나 거기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과 이로움, 모포기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문제나 그것을 규정하는 요인에 대해 노농과 벌인 기술적 문답의 내용들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같은 문제를 다룬 각종 농서들의 서술을 새롭게 조명하여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고 더욱 진전된 논점을 형성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작업을 추진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셋째, 이 점과 관련하여, 객관적 성격의 구술 텍스트가 필요하고 인터뷰를 통해 그러한 성격이 강한 텍스트를 구성해내고자 할 경우, 사회생활의 물질적 형태들에서 나타나는 비담론적인 실천의 양상들을 맥락적·계열적 지식을 토대로 텍스트화함으로써 연구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현지조사의 전체과정을 통해 삶의 물질적인 형태들 혹은 비담론적인 실천이나 관행 등에 관한 박물학적인 정보를 노농들로부터 확인하고 그 연원과 의의에 대한 토론을 벌임으로써 의외의 수확을 올리는 일이 많았다. 그러한 삶의 물질적인 형태들로는, 가령 이 글과 같이 농업기술 및 생산관행과 관련한 연구라면, 기후나 토양에 관한 정보, 마을 내 논밭의 구성비나 공간형태, 두둑이나 고랑의 작성법과 규격, 농기구 등

각종 생활도구의 재질이나 만듦새, 농사작업의 선후관계라든가 기후조건·다른 농사작업·다른 생활사적 사건들과의 시간적·노동과정적인 관련성, 마을의 인구나 성씨집단 혹은 작업집단의 규모와 구성, 작업복이라든가 작업/휴식 시간의 배분, 그리고 이것들과 그 밖의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 민속용어들과, 그에 대한 설명에 사용되는 표현이나 내러티브들에 나타나는 순전히 형태적인 특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분포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당연히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문서 텍스트들이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의 세계로 인터뷰를 이끌어가며, 인터뷰를 통해 구성 가능한 사료 텍스트의 새로운 영역, 그리고 인류학에서 ‘관찰’이라는 방법이 갖는 의의를 역사인류학적인 작업에서 불완전하나마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척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터뷰를 통해 현지인들의 설명체계나 해석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물질적 경관 자체를 재구성함으로써, 참여관찰이 불가능한 과거의 삶의 현장에 대하여 참여관찰을 하였다면 기록하게 되었을 정보들을 수집·정리하는 작업이 역사인류학의 기본적인 과업으로서 불가결하다. 흔히 비-인류학전공자들은 인류학적 역사연구의 방법론적 핵심이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구술 텍스트의 구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표자는 이것이 일종의 오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류학적 역사연구의 방법론적 핵심은, 오히려 인터뷰의 전후 혹은 진행 중 구술 텍스트 외에 다른 지각 내지 관찰 가능한 ‘역사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구술 텍스트와 병치시키면서 교차편집하는 기법에,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온 학문적 전통의 급진성—그 자체가 애초에 의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에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역시 위에서 두 번째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문서 텍스트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경험과 느낌, 사회역사적 현상의 극히 주관적인 측면을 추출해내는 작업의 성패는, 도처에 널려있는 문서 텍스트들로부터 어떤 부분을 인용할 것인가,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농법』이 이미 많은 검토를 거친 기본적인 문헌자료들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농업사연구와 다른 논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그렇게 되었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아마 이와 관련한 관점의 차이, 그리고 역사학자로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학자로서 훈련받았다는 학문 정향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문제는 한 두 가지로 그치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 문헌자료의 작성자들이나 거기에 기록된 이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윤리의식과 적당한 속물근성, 회로애락의 감정과 도덕적인 이상과 세속적인 욕망을 동시에 가지고 해당 문헌자료를 작성하거나 또는 거기에 기록되고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다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농민들의 구술이나 문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농민들은 ‘현실 시골의 농사꾼’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부심을 지닌 ‘조선 노농’이기도 한 것이며, 조선총독부 등 각급 관청·연구기관의 문서 작성자들은 ‘제국의 지배 엘리트’이지만 동시에 ‘서울 촌놈’이나 ‘일본 촌놈’—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혹 민족적 편견의 결과로 여길까 우려하여 사족을 달면, 굳이 ‘일본촌놈’을 언급하는 것은 주로 다루는 시기가 일제시기이고 조선의 일본인 텍스트 작성자들은 ‘서울촌놈’이 아니기 때문이다—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지 않을 법한 일은 그들에게도 하기 힘든 일인 것이고, 우리가 명분이나 원칙에서 이탈하여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는 대목에서는 그들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해관계로부터 명분과 의리의 질서로 돌아서는 지점에서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다소 추상적인 설명이 되고 말았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인간으로서 사료 상의 인간들을 대하는 관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인식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